

양돈단지 조성사업 중간 평가

축산물 수입의 전면개방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최초 '91년도 3개소 조성계획으로 출발하였으나 '93년도 농림수산부의 계획에 의하면 전국 27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는 축사설비의 분뇨처리시설 등을 용자 또는 보조지원한다.

2. 단지조성절차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시달되는 “축산발전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절차를 열거하면 우선 사업대상농가를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농가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대상농가와 부지를 기준으로 단지규모를 확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게 되는데 농림수부장관의 검토 확정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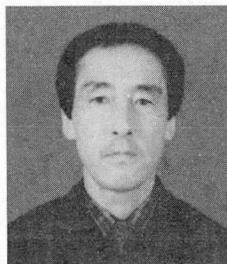
3. 대상농가 선발 및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농가 선발과 대상부지 선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만치 농가선발 및 부지 선정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가. 대상농가 선발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하면 기존양돈농가로서 단지조성 입주를 희망하는 5~20농가를 선발하여 농가당 모돈 50~200두

축산단지 조성절차와 방법



김희정
(나주군청 축산계장)

나주군에서는 '91년도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93년 6월 본사업을 마무리하였기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몇가지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양축농가나 관련기관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축사부지의 공동확보와 시설배치의 효율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사양관리와 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출하체계의 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사육규모의 축사를 신축토록 추진하고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농가는 거의 영세농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시설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돈사자동화시설이 완료되었으며 투자한지 몇년 되지 않은 사업장을 폐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지 입주를 기피하며 재래식 돈사에서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영세 농가만이 단지조성을 희망하게 되고 사업의욕만이 앞선 영세 농가 위주의 단지조성을 추진하다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본 군의 경우 12명의 농가가 농가당 7천만원 정도의 자기자금 투자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축사부지의 공동확보와

시설배치의 효율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사양관리와 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출하체계의

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이다.”

나 사업완료까지는 1억 3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몇 개월씩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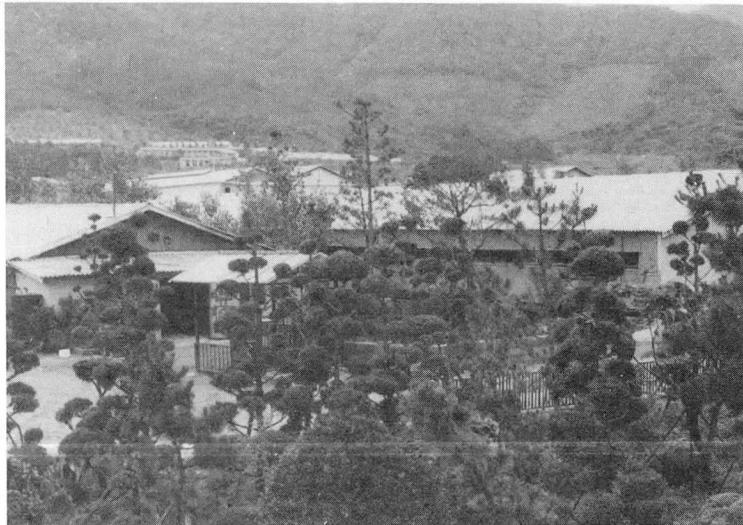
따라서 대상농가 선발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도 중요

하지만 자기자금 부담능력과 탐보능력 등을 다른 여러가지 조건과 함께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상지 선정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선정은 교통이나 도로사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모든 사항을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근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조성되면 축산폐수 유출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과리, 모기, 냄새 등 환경공해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선입견때문에 사업착수 이전부터 조성반대 여론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나주군 양돈단지의 경우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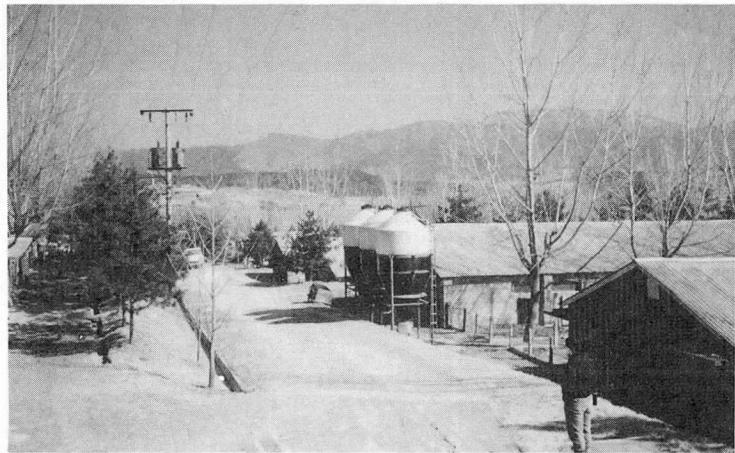
의 후보지 중 1개소를 선정하여 15,000여평의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성지로부터 1~2km 떨어진 부락민들로부터 단지조성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도,군청 관련 각 부처에 제출되어 이를 이해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설득방법으로는 3~4개 부락 전주민과 사업대상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만약 양돈단지조성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시는 즉시 보상을 실행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징구하였으며 분뇨 처리시설이 설치된 대단위 양돈장 시찰 등을 실시한 끝에 가까스로 부락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4. 각종 인허가업무 등 행정지원

대상자 선발과 조성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착수 이전에 선행하여야 할 사항이 농지전용(산림훼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이다.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관부



서(축산계)에서 대행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관계 공무원이 타 부서의 관련법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때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다. 축산부서는 사업을 무리없이 완료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농지관련부서나 건축, 환경부서 등은 거의가 규제를 위한 법에 의해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사분란한 행정지원을 위하여는 사업 시행전 관련부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축산단지조성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계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금융지원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책

정된 사업비는 개소당 용자 14억원과 지방비 1억원 보조, 그리고 5억의 자담을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고 보면 사업비가 많이 초과되기 마련이다.

나주군 양돈단지의 경우 31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담능력은 물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한 사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후취담보나 신용보증보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용자취급 기관에 협조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막상 용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여신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취담보 등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융자지원을 개소당 2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였으면 좋겠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후취담보의 적극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대상농가의 자금압박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면 한다.

6. 맷는 말

양축시설의 단지화로 생산구

조를 개선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확대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사업비를 상향책정해 주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확고한 사업추진의지와 자금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상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지도를 행해야 할 것이며 대상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하에 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톱밥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이제 걱정마십시오.
저희 **동신목재**에서 톱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귀하의 소득을 증진시켜 드릴 것입니다.

동신목재

대표 : 곽 춘 신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촌동 90-1

전화 (032) 574-2832